

野 “김현지, 국민 앞 재등장” 與 내부서도 “방식 부적절”

문진석·김남국 '인사총탁' 비판

송연석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

서영교 “경고 외 추가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이 '인사총탁 문자'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4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이 홍성남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에게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의원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중에 후배고 (이재명)대통령이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직책을 되는 것 같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관)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비서관이 “네 할만, 제가 훈식이 형이랑 한지 누나한테 추천하라고”고 응답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포착된 것이다.

특히 이날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김현지 실장이 재소환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연석 원내대표는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

졌던 '해지종지 현자누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 인사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캐리커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와 여론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농단 처리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자누나한테 추천하면 ‘민사현통’이라는 것을 공중했다”고 비판했고, 박수영 의원은 “김 실장은 대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선 실세’라며 “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던지며, ‘김현지 자기기’에 올랐다는 지적 분분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그런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이 언론에 적하는 것도, 내용을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ym 라디오에 출연한 서 의원은 “강력한 경고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 추천은 할 수 있지 만 추천 절차가 있다”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박수영 수석대변인은 문 의원의 인사총탁 논란과 관련해 “우선 형식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검찰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된 것은 아니지 않나”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가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와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함 처신 송구하다”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았던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국민의힘,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신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당헌 개정안 상정 의결

공천심사에 평가결과 활용

‘전국청년지방의원회’ 도입

국민의힘이 4일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평가하고 공천에 반영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회용 사무총장은 이날 제1산림명을 통해 “이번 당헌 개정안은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인 당의 철학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했는지 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판단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당헌에 신설하고 그 구성과 기본적 규정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민생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 선언문이자 이기는 담으로 나아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며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으로 무장한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죄를 끝낼 대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과거 관성에 벗어나야 한다”며 “여의도의 낡은 문법이 아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위원회와 전국청년지방의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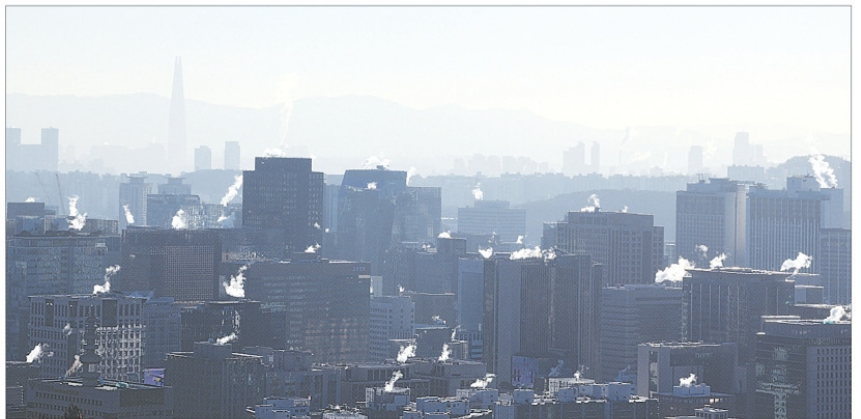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중앙당과 전국 시도 당에 설치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또한 공역·기초단체장, 공역·기초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당 지포, 여론조사, 개인 프

레젠테이션(PT)을 통해 평가한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등 공천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연말마다 시행하는 활동과 실적 평가는 물론 당직 활동, 의정 활동, 공로, 징계, 법적 사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심사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주위 계속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새벽에는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건물들이 난방을 가동하며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

1/김남국

경기도,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28곳 점검… 인사·복무등 실태 확인

경기도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1월까지 두 달간 '2025년 공공기관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이나 확인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사, 복무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점검은 전체 공공기관 총괄 담당 부서와 기관별 소관부서가 합

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별점검은 공공차량의 사용 실태, 복무 관리, 인사 및 채용 절차와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점검은 규정 정비, 회계·예산, 자산관리, 안전관리, 행정사무자 및 인력 보조사항 조처 등 부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2026년 2월 중 전체 기관과 공유되며, 이후 연말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 제발에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의 재발 방지와 현장 중심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종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논의

인천시

인천시가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청혁신단의 지속적인 제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정책백선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수도권 교통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 시·도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광역버스, 완충체계, 요금 징산, 도시철도 연계 등 단선 행정구역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핵심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적이고 협력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광역교통을 전담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

할 사무로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장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사업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통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 참여한 석종수 인천연구원 박사과 시청혁신단 위원을 각 시·수도권은 대중교통 정책이 각각 달라 비교육적인 만큼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원구 시청혁신단장은 “수도권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이자 교통권으로 기능하고 있어,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원구 단장을 비롯해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청혁신단 27기는 정기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글로벌 비즈인 혁신 허브 IFEZ

**글로벌 항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글로벌비즈인
**혁신 허브
IFEZ**